

정권따라 바뀌는 백년대계 “다양성 말살 교육평화”

(平鈍化)

고교체제 전환 찬반 논란 가열

찬성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해소”
반대 “강남8학군 부활 사교육 ↑”

2024학년도까지 쏠림현상 우려
명문학군 이전 등 집값에도 영향
현재 중3·초등학생 혼란 불가피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에 따라 2025년 이후 고교 유형은 일반고와 과학교·영재학교, 특성화고 등으로 단순화된다. 하지만, 2025년을 전후해 고교 체제가 기존과 달라짐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교육 수요도 단기간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교와 영재학교의 경우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외고 졸업생 상당수가 이공계열이나 의학계열 등에 진학하고 자사고도 주요 대학 진학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과학교와 영재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이공계열로 진학해 설립 취지가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 영기자 son@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전국단위로 선별하는 전북 전주 상산고나 외대부고 등 평준화지역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로 전환되고 전국단위 선발도 불가능해 학생 선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일반고 전환 이전인 2024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은평구 하나고, 광진구 대원외고, 강동구 한영외고, 강서구 명덕외고, 성북구 대일외고 등이 일반고 전환 이후 지역 내 명문고로 부각될 수 있고, 현재보다 입학이 더 어

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등학교 4학년 이하 학부모 중 주변에 명문 일반고가 없을 경우 명문학군 또는 지역 내 거점 명문학교 인근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중고 학부모별 고입과 대입을 놓고 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시모집 위주에서 정시모집 비율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축소 등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졌다.

현재 중3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향후 일괄 폐지가 발표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교 선택에 대한 불확실, 대입제도 불확실, 학군선택 등에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기준 외고, 국제고, 자사고였던 학교와 명문학군으로 쏠림현상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 올해 고교 선택 결과, 향후 입시제도의 변화, 일반고의 획기적인 역량 강화 등의 모멘텀이 없을 경우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명문학군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계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해소를 위해 일반고 전환에 환영하면서, 내년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재지정평가부터 일반고 전환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면서 일반고 전환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물론 외고와 국제고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대체하는 입시전문고가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인 혼란화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 최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등을 없애도 고교 서열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강남 8학군과 명문고가 부활하고, 고교학점제 도입도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화(平鈍化) 쳐서”라면서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애경 vs HDC 양강구도… 월말 윤곽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마감

대기업 참여 등 깜짝 변수 없어
심사 후 우선인수협상자 선정
KCGI, SI 포함여부 파악 안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예상대로 HDC현대산업개발·애경그룹·KCGI 컨소시엄 등 3군데가 참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해 진행된 본입찰이 마무리됐다. 이번 본입찰에는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KCGI-뱅커스트리트PE 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GS 등 유력한 대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실제로는 이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아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는데 있어 애경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입찰이 마무리 됨에 따라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 측은 이날 오후부터 본입찰 서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 후 1~2주의 기간동안 심사를 거쳐 우선인수협상대상을 선정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인수협상대상자 선정은 11월 말~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과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이후 주식매매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가능하면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애경그룹은 주간사의 지침에 맞게 준비를 마치고 입찰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고객 서비스 수준도 높이는 한편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경그룹은 항공사 간 M&A를 통해서만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그룹은 먼저 성과부문에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애경은 “과거 20년 간 전세계 항공산업 내 주요 M&A는 항공사 간 M&A이며 해당 케이스에서 유의미한 성과개선 사례가 절대 다수 존재한다”며 “중국 동방항공과 상해항공의 경우, 인수전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7.5% 수준에서 인수 후 3년 평균 4.1%까지 증가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단·사업역량 등 전방위 부문에서도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애경은 “투자 정상화를 통한 노선·기단의 기본 구조 개선으로 노선 및 기단을 최적화할 것이다”며 “비수의 단거리 노선 조정 및 계열사와의 역할 분배로 노선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항공업 트렌드 반영을 통해 고수익 사업 모델로 전환할 것이다”며 “이는 제주항공의 LCC(저비용항공사) 역량과 아시아나항공의 FSC(풀서비스항공사)의 장점이 결합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도 이번 인수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만 1조 5000억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탄탄한 현대산업개발은 과감한 투자로 승부를 거는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사업 다각화 전략을 평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인수 시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등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리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KCGI는 막판까지 전략적 투자자(SI)를 구하기 위해 유력 대기업과 접촉하는 등 사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이날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SI를 포함했는지에 대해 구체화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文 ‘檢 개혁 메시지’ 주목 윤석열 총장 대면 관심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조국 사퇴 후 檢 총장 첫 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의 이번 만남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첫 대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4차례 주재했다. 그리고 당시 회의 때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은 빠짐없이 참석했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 때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된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16일 이례적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

고 당부했다.

의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7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은 분명하다”며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이 다소 주축인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눈여겨볼 점은 윤 검찰총장의 행보다. 최근 윤 검찰총장 행보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문 대통령 행보와 궤를 달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검찰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검찰 중립성을 비교해달라”라고 질의했고, 윤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과장·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의장)을 구속할 때 (권력으로부터) 별관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